

## 분권으로 지방소멸·고령화시대 헤쳐 나가야

강원일보 오피니언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국정 운영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는 지방정부의 창의성을 약화시키며 주민 참여와 의지에 대한 지방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고속 성장해 왔다.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통일된 사회·경제체제를 발전시켜 왔다.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것도 이 같은 중앙집중식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많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시에 따르도록 법률과 예산권으로 압박했다.

정당도 공천권으로 생활 정치를 하는 지방의원을 옹호했다. 지역별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화된 중앙 중심의 정책과 거버넌스(행정) 체제는 다양성과 창조성이 요구되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

지방에서는 예산과 권한, 자율권을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공천 폐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지방분권전국회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분권균형발전 실행 조속한 입법 및 로드맵 제시를 촉구한 배경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2월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를 5대 국정 청사진으로 제시하고 '활기찬 지방'을 독립 의제로 다뤘다.

정부 출범 당시 천명했던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의 국정목표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일단 고무적이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방시대'는 무수히 언급됐고 현 정부를 상징하는 하나의 브랜드처럼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과감한 권한 이양'과 같은 발언도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 출범 뒤 해가 바뀌도록 손에 잡히는 것이 거의 없다.

윤석열 정부 9개월째를 맞고 있는 2023년 벽두에도 여전히 지방시대를 실행해야 할 추진 주체는 아직도 온전히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지만 지난 정기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지방분권·균형발전은 여야 간 정치적 쟁점 사안이 될 수 없다. 지방소멸, 인구절벽, 저출생·고령화, 지역 격차와 같은 국가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여야의 협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무회의 통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으로는 대학 위기,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더욱이 자문기구 수준의 지방시대위원회로는 분권균형발전정책을 펼쳐 나가는 어렵다. 강력한 분권균형발전추진기구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및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 대안을 내놓아야 함은 물론이다.

출처:강원일보 오피니언

정책제언 II

## 조직문화 개선이 미래를 앞당긴다

정일섭 | 강원도 행정국장

지난해 여름 미국의 한 20대 남성 엔지니어가 자신의 SNS에 게시한 17초 영상이 전 세계 'MZ세대' 직장인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일이 삶 자체일 수 없으며, 나의 가치는 일의 성과물로 정의되지도 않는다."

요즘 청년들이 직장과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따라서 주어진 업무만, 직장에서 돈 받는 만큼만 일한다. 그 이상은 하지 않되, 퇴사하지는 않는다. 이른바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이다.

2030의 조용한 사직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더 이상 직장을 자아실현의 공간이 아닌,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돈벌이 수단 정도로 밖에는 여기지 않는 우리 사회 젊은이들의 슬픈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든다.

도내 MZ세대 공무원 또한 직장 내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근무경력 10년차 미만 공무원의 의원면직자 수는 2020년 157명, 2021년 202명, 2022년 211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이중 3년차 미만 퇴직자 수가 무려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MZ세대의 공직 엑소더스다.

전문가들은 MZ세대의 위기의 원인을 조직문화에서 찾는다. 수직적 위계질서, 과도한 업무, 비효율적 관행 등이 MZ세대의 개인주의, 개성과 창의 존중, 워라벨 등의 가치와 상충한다는 것이다.

이런 MZ세대 직업관에 부응해 조직혁신을 단행한 회사가 있다. 바로, 세계적 IT 회사 구글이다. 구글은 신뢰와 소통을 조직혁신의 근본정신으로 삼았다. 구글은 우선 직원의 창의적인 역량을 믿는다. 누구나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내 옆자리 동료를 승진을 위한 경쟁자가 아니라 나와 조직을 더 성장하게 하는 협력자로 여긴다. 다음은 소통이다. 소통의 초점은 평가가 아닌, 도움이다. 상대의 의견을 비판하기보다 이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과로 결실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교감이다. 이런 긍정적 피드백을 얼마나 제공했는가를 인사고과에 반영함으로써 소통이 중시되는 근무환경을 조성했다.

강원도도 MZ세대 공직자들의 이탈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뢰와 소통에 기반을 둔 '도정혁신 추진단'을 2022년 9월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도정 전반에 걸친 총체적 혁신을 위해 2016년부터 운영해 온 '일하는 방식 추진단'을 더욱 확대 구성한 TF다.

MZ세대 직원을 주축으로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이들의 생각에 전문가 자문을 융합, 실질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해 실천해 가고 있다. 공간 혁신을 통한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어떤 부서는 개인 노트북을 활용한 자율 좌석제를 도입했고, 간부 공무원의 집무실을 축소해 회의실로 전환, 직원 간 자유롭고 창의적인 대화가 오갈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 계급·연령·성별을 초월한 교류를 위해 청사 아침 라디오 방송 '소통의 달인' 코너를 통해 간부 공무원과 직원 간 대화의 시간도 갖고, 올해 시무식은 보이는 라디오에 도지사와 노조위원장이 직접 출연해 직원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2022년 행정안전부 주관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조직문화 개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MZ세대들의 열망도 발견할 수 있었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소통을 통해 그들의 개성과 창의력을 뽐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다면, 직장에서 조용히 퇴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장의 주인공이라는 주인의식을 심어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2023년 계묘년 새해, 강원도가 628년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재탄생한다. 새롭게 태어나는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서 우리 구성원도 새롭게 깨어나야 한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나의 미래, 더 나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앞당기는 조직문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출처:강원일보 오피니언\_정일섭 강원도 행정국장



국가보훈처

### 17개 중앙보훈단체장들 <국가보훈부 승격 조속한 추진> 한 목소리

- 국가보훈처, 17일(화) 2023년 중앙보훈단체장 신년간담회 개최 -

- 중앙보훈단체장들 “보훈부 승격 목전, 빠른 시일내에 승격 위해 보훈단체도 적극 힘 보탬 것”
- 각 보훈단체별 현안 및 보훈관련 다양한 건의 이어져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부 승격 원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는 당당한 국가보훈부 자리잡도록 힘 쏟을 것, 끝까지 힘 보태주시길”
- 대한민국상이군경회를 비롯한 17개 중앙보훈단체장들이 국가보훈부의 조속한 승격을 한 목소리로 기원했다.
- 국가보훈처는 17일(화)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윤종진 차장, 실국장을 비롯한 17개 중앙보훈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간담회를 가졌다.
- 이 자리에서 중앙보훈단체장들은 “보훈의 기본 틀을 바꿀 수 있는 보훈부 승격이 목전에 와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승격이 이뤄지길 기원하고 보훈단체에서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 이종열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장은 “오랜 시간동안 기다리고 기원해 온 보훈부 승격이 이뤄지는 것은 보훈단체로서 그야말로 영광”이라며 “국가보훈처와 보훈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단체가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황일봉 5·18민주유공자부상자회장도 “5·18민주유공자 단체로서 보훈가족들의 오랜 염원인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승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힘을 보탬 것”이라고 밝혔다.
- 국가보훈부 승격을 앞둔 상황에서 단체현안을 비롯해 보훈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건의도 이어졌다.
  - 보훈단체장들은 제대군인 지원정책 개발 전담팀(TF) 구성, 위탁병원 등 보훈의료서비스 및 의료급여 확대, 6·25전쟁 역사 계승, 국립5·18민주묘지 통합 추진에 따른 예산지원 등을 건의했다.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에 대해 “오늘 보훈단체장들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을 윤석열 정부의 보훈정책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면서 “2023년은 명실상부한 ‘국가보훈부’ 승격의 원년으로서, 보훈의 가치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는 당당한 ‘국가보훈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이어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우리 보훈가족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 윤석열 정부, 청년의 국정참여 및 일경험 기회 확대 위해 국내외 청년인턴 대폭 늘리기로

[ 작년 2.2만명→올해 3.5만명 ]

- '09~'10년 이후 최초로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채용(2천명)
- 공공기관 인턴 채용 확대('22년 1.9만명→'23년 2.1만명)
- 국내외 우수기업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 신설(7.7천명)
- 청년 해외 봉사·일경험 기회 확대('22년 2.7천명→'23년 4.5천명)
- 정부는 1.17(화) 국무회의에서 청년인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청년 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정부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였으며, 희망·공정·참여의 3대 기조 아래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 초로 국정과제에 청년정책 반영 : (희망)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 (공정) 공정한 도약기회 보장 · (청년) 참여의 장 대폭 확대
  -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민간 협업·청년참여 등 수요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 청년들의 일경험 및 해외봉사, 정부정책 참여 등 다양한 일경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공공부문 인턴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올해 공공부문의 인턴 채용 및 지원규모는 국내외 인턴을 포함 총 3.5만명\* 수준으로 지난해 2.2만명에서 1만 3천명 이상 확대됩니다.



• 중앙 2천명(신규)+공공기관 2.1만명(확대)+재정사업 7.7천명(신규)+해외 인턴 4.5천명

□ 우선 중앙행정기관의 선발인원은 부처의 기능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올해 2천명을 시작으로 향후 4년간('23~'26년) 총 1만명 이상 채용하고, '26년에는 올해 대비 2배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 ('23년) 2천명 → ('24년) 2.5천명 → ('25년) 3천명 → ('26년) 4천명

- 45개 중앙행정기관(부처청 및 위원회 등)에서 기관별 여건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도록 배치하게 되며, 지역별 균형 등을 고려해 나갈 예정입니다.
- 청년인턴 채용 자격은 청년기본법상 청년(만19세~34세)이며, 기관 자체적으로 직무에 따라 우대요건을 둘 예정입니다.
- 채용기간은 6개월로 하되, 대학 재학생 등 다양한 사정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인턴 지원자가 원할 경우 6개월보다 짧은 기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인사혁신처에서 채용·복무·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각 기관별 상황에 맞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며, 공정한 채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소속 고위 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은 제한받게 됩니다.

※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범위(이해충돌방지법 § 11①)

- 소속 고위공직자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아울러, 인턴의 단순 사무보조나 잡무는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전공과 관심직종 등을 고려하여 전문분야별 실무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 주요 업무 예시

- 정책 현장 방문 및 의견수렴 과정 참여
- 기관장 등 브리핑 참여 · 모니터링
- 소관 정책 관련 제도 및 연구자료, 해외사례 등 조사·정리
- 청년보좌역 업무 및 2030 자문단 운영 지원 등 부처내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 운영과 연계하여 부처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견제시 등 참여
- 회의 준비 과정 및 행사 준비 과정 경험(참석자 확인, 회의장 세팅 등)
- 정부 주요 정책 관련 토론회, 간담회 참석

○ 청년인턴에 지원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편의를 위해 기관별 채용계획 및 공고문을 해당 부처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 함께 게시할 예정입니다.

□ '08년도부터 청년인턴을 지속 채용중인 공공기관은 올해 채용규모를 확대하고('22년1.9→'23년2.1만명), 이중 60%인 1.2만명 이상을 상반기 중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청년들의 실질적인 업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각 기관들이 현재 1~4개월인 인턴 채용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하도록 유도\* 하고, 청년인턴 대상 만족도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내실화 노력을 지속해 나갑니다.

• 6개월을 초과하는 인건비를 경상비 절감분으로 인정 및 6개월 이상 청년인턴 실적 경영평가 반영

□ 또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민간에서 직무를 체험하는 민관 협업형 청년 일경험 사업을 확대해 나갑니다.

○ 기존 직무체험 지원사업은 민간기업 탐방 등 단기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실무경험 등 다양한 일경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이를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 올해 7.7천명 규모 운영되는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은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청년들이 2~4개월(사전직무교육 1개월 포함) 동안 국내외 우수기업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면서 실전형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형	주요 내용		지원대상	기간
실무캠프 (2천명)	별도 사전 직무교육 포함 (1개월)	- 기업현장에서 실제 과업을 직접 수행 - 기업은 과업 수행 지도를 위한 멘토 프로그램 운영	재학생 고학년	1개월
인턴십 (5.7천명)			미취업 청년	3개월

○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인턴십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포함한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을 1월말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 이와 별도로, 청년들의 해외 인턴십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 청년들의 해외 봉사·직무 경험 기회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추진 예정인 해외 봉사단 및 일경험 프로그램은 작년 2.7천명 수준에서 올해 4.5천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특히, 기관별 산업·분야 특화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분야 전공 또는 관심 청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기관명	사업명	'22년(명)	'23년(중기)	비고	
공공기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WFK KOICA봉사단 국제개발협력인재양성 등	2,369	4,046(1,67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무역관 인턴십	0	50(50)	
	수출입은행	해외사무소 인턴십	34	34(0)	
부처	외교부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권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등	176	134(▽42)	일부사업 축소
	농식품부	청년해외개척단*(aT)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농정원) *코로나 여파로 '22년 기존계획 대비 50% 인원만 해외파견	100	150(50)	
	국토부	해외인프라 청년인턴십(LH 등)	0	25(25)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7	29(22)	
	산업청	해외산업 청년인재육성	16	16(0)	
총계			2,702	4,484(1,782)	

-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인턴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 체계적 일경험 정책지원·관리를 위해 범정부 협업체를 신설(가칭 일경험 정책협의회)하는 등 각 기관이 내실있는 인턴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청년인턴들이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이 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인턴들이 실질적인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기관장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하였습니다.

문화재청

올해부터 청와대 관람 순환버스 누구나 무료탑승 가능

- 어르신·임산부·아동·장애인 대상에서 전 국민으로 탑승 확대... 운행 시각도 편의성 조정 -

-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단장 채수희)은 지난해 6월 15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산부, 8세 이하의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운행하고 있는 청와대 관람 순환버스(셔틀버스)의 탑승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 운행 시각도 30분 단위로 1대씩 운영하던 것에서 1대를 더 늘린 총 2대를 투입하되, 관람 시간에 맞춘 효율적인 세부 배차 일정 조정으로 관람객 편의를 높였다. 또한,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전용 리프트 차량도 별도 운영해 접근편의성을 개선하였다.
  - \* 청와대 관람 순환버스 누적 탑승인원('22.6.15~'22.12.31): 49,820명
- 순환버스는 청와대 휴관일인 화요일을 제외한 청와대 모든 관람일에 운영되는데, 경복궁 동편주차장에서 청와대 연무관까지의 노선을 관람시간에 맞춰 조정된 하루 12회 일정으로 왕복 운행하되, 지난해와 달리 경복궁역 정류장과 동의파출소, 두 곳의 경유지에서도 승하차가 가능하게 되었다.
- 순환버스가 출발지인 경복궁 동편주차장에서 만차가 될 경우 다음 경유지인 경복궁역 정류장에서는 별도 정차 없이 운행되겠지만, 이 경우에는 인근의 국립고궁박물관 정류장(경복궁 영추문 인근)에서 서울시 자율주행버스를 탑승할 수 있어 청와대까지 어려움 없이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서울시 자율주행버스는 올해 11월 9일까지(매주 월요일~금요일) 경복궁 중심의 순환 구간으로 운행 중이며, 탑승 시 교통카드를 접촉하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은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공간인 청와대의 개방 2년차를 맞아 관람 순환버스 운행 등 방문객들의 관람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운영해나갈 것이다.



#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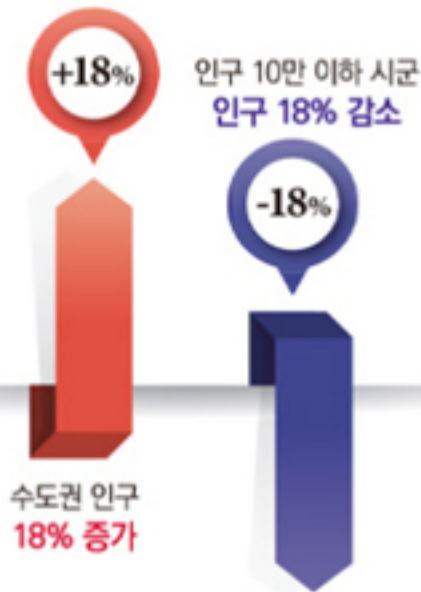
전성만, 유보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01. 도입배경 및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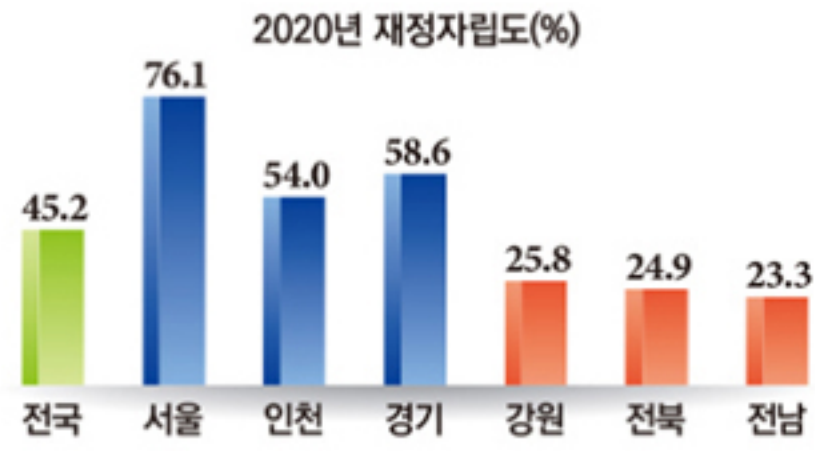
고령화, 출생률 저하에 따른 심화된 지역발전격차는 지자체의 재정격차로 연계

- 2020년 최초로 수도권 인구가 50% 초과 및 인구 데드크로스(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음)현상 발생,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 격차 심각
- 인구유출과 저출산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기부금 모금을 통한 재원확보로 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

[지역 인구 감소(2000 ~ 2020년 간)]



[지역간 균형발전]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지방재정여건악화"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고향사랑기부제)

주민세(소득세)의 납세 형식에서 기부금 형식으로 변화

- 2008년 대선 공약에서 주민세 10%를 고향으로 보내는 고향세 논의가 처음 시작되었고, 2017년도까지는 주민소득세 및 주민세의 납부등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유사한 방식이었으나, 20대 국회에서 법안발의 시에는 "기부금" 형태의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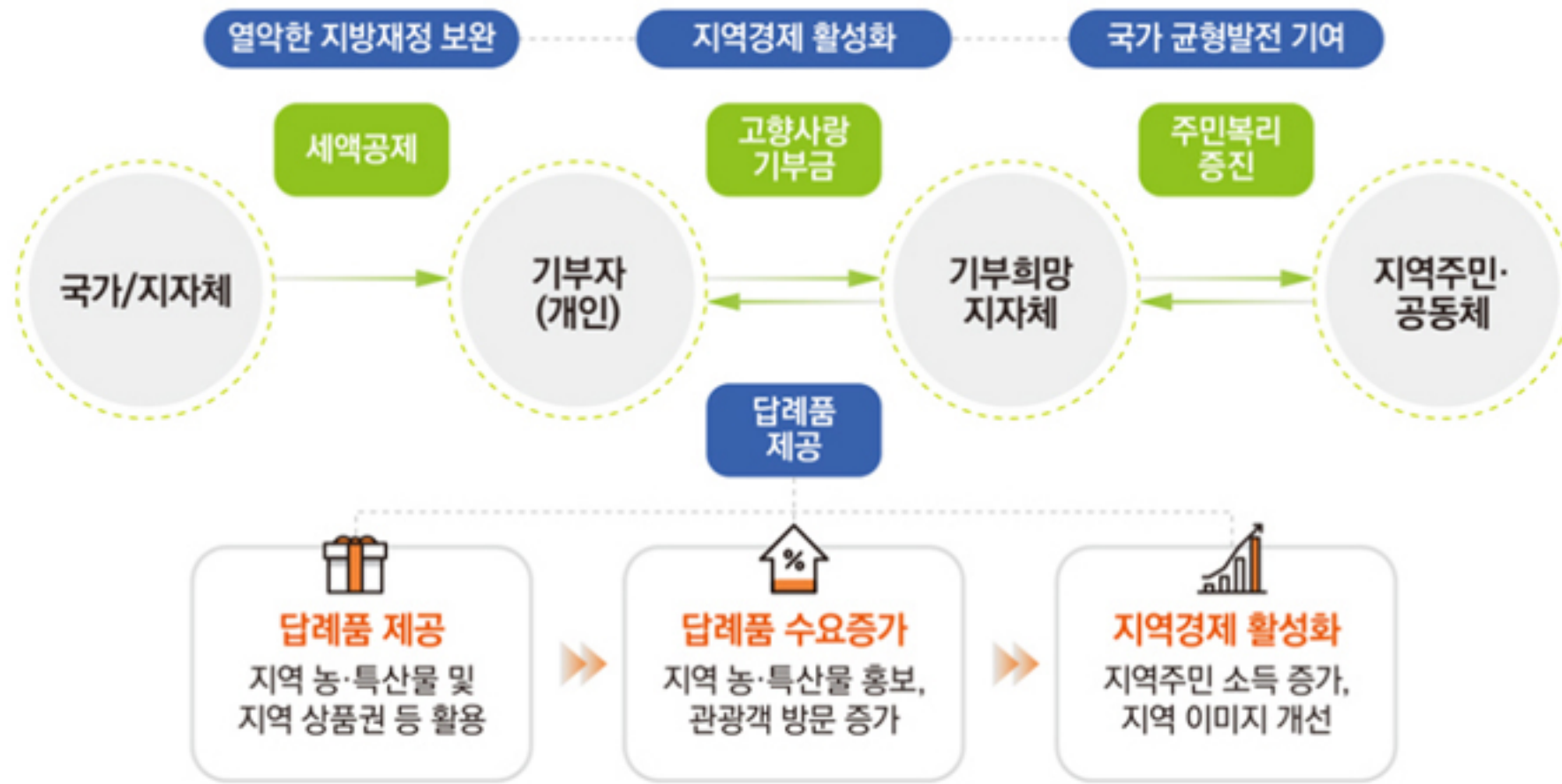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고향사랑기부제)

## 02.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발적으로 주소지 이외에 지자체에 기부를 통해서 지자체 사업 추진

-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통해서 1) 사회적 취약계층, 2) 청소년 육성 및 보호, 3) 문화, 예술, 보건 증진, 4) 시민참여, 자원봉사 지원, 5)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 사업 등을 시행





**지방재정확충,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9) 기부금에 추정에 따르면, 1인당 99,146원을 기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이를 기초로한 지방재정확충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음
- 기부금 추정이 최대 (성인 3천 5백만명 기준)시, 기부금 규모는 3조 4천억원 규모로 지자체 재정확충 효과는 3조원에 이르고 1조원의 담례품을 지자체에서 생산함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
- 수도권 지역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기부금이 기부될 경우에 지방재정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발생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역 격차 심화 우려 발생

모집단 인구수(명)		1인당 연간 평균 WTP 추정치(원)	연간 총 규모 추정치	중앙세액공제*	지자체세액공제	담례품규모**
만 19~65세 국민(19년)	34,738,329	99,146	3조4,442억	3조1,310억	3,130억	1조332억
전체 납세자(19년)	17,277,038		1조7,129억	1조5,572억	1,557억	5,138억
종합소득세 납세자(19년)	6,902,514		6,844억	6,221억	622억	2,053억
출향인구(20년)	28,423,000		2조8,180억	2조5,618억	2,562억	8,454억

※ 2019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 기금 규모 추정을 토대로 저자 작성  
 \* 10만원 이하 기부 시, 100% 세액공제를 가정 중앙에서 전체금액의 91% 세액 공제  
 \*\* 담례품 규모는 기부금 30%로 가정

**고향사랑e음(온라인), 지자체 및 지정금융기관(농협)에서 기부 가능**

- 고향사랑기부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는 기부자는 고향사랑 기부를 지자체, 고향사랑e음 정보시스템(온라인), 지자체 지정 금융기관(농협)에서 접수가 가능하고, 기부자의 기본정보 확인을 통하여 전국 어디서나 기부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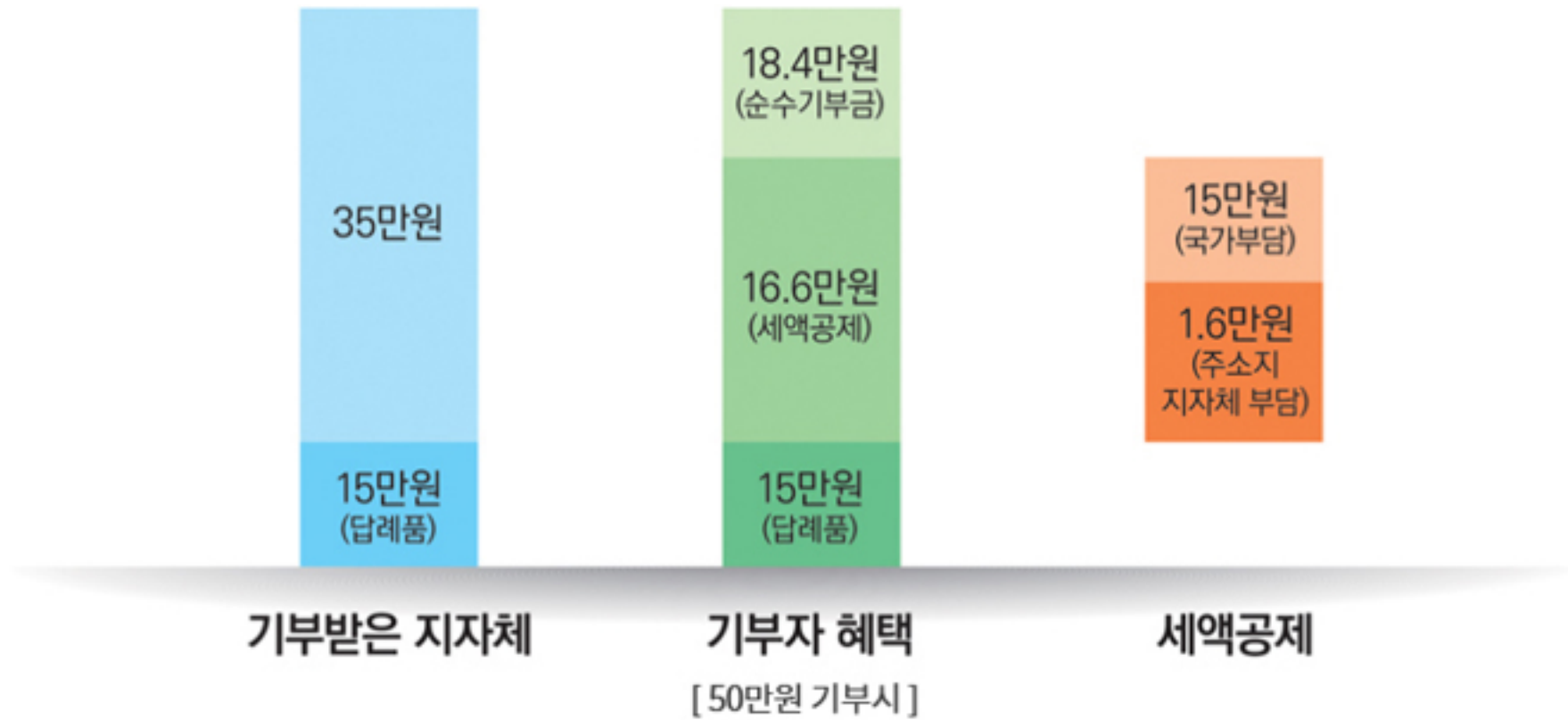


개인 500만원 기부가능	기부금 30% 범위 내 담례품 제공	세액공제 혜택(자동처리)
1인당 연간 500만원 (거주지 외 여러 지역 선택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특산물 제공(농축수산물임산물 등)</li> <li>• 지역관광, 숙박, 서비스상품, 상품권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만원까지 전액공제</li> <li>• 10만원 초과 분 16.5% 공제</li> </ul>



답례품 및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지역의 기부사업 지원을 통한 지자체 관계 형성

- 기부자는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서, 지자체 기부사업의 지원을 통해 지자체와 관계 형성을 맺을 수 있고, 기부의 급부로 지자체로부터 답례품 및 세액공제의 동시 혜택을 받음



-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9조에서는 지자체는 기부금의 접수현황 및 기금의 사용 내역 등을 공개원칙 하에, 투명한 기부운영제도를 통해서 투명한 기부문화 정립 가능

03.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향후 과제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지자체의 책임성 확보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 및 제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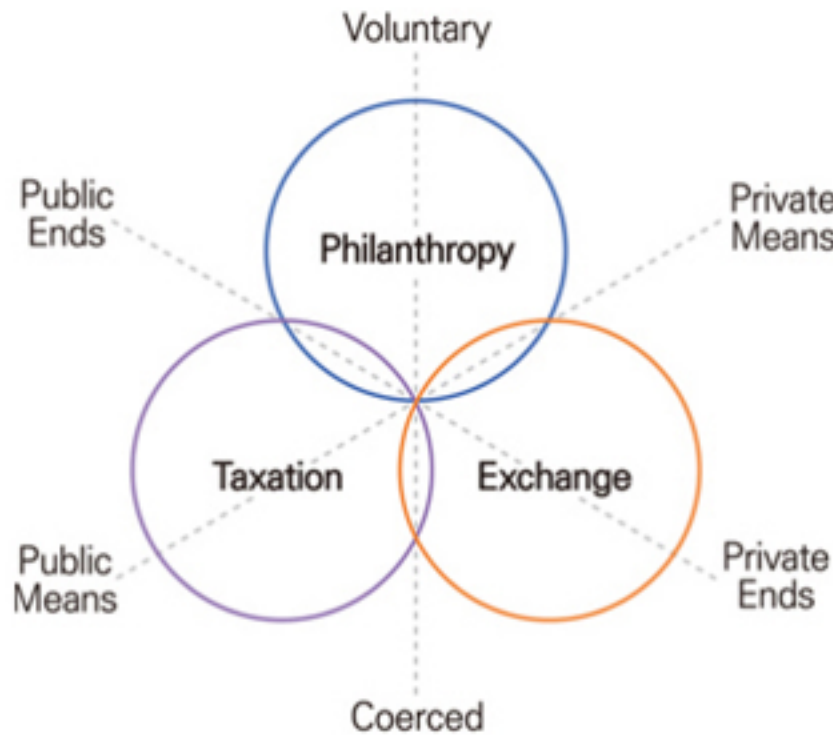
- 현행 법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10여년의 시행착오를 토대로 입법취지화 되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의 법령중심으로 되어있어서 1)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 관련 조항, 2)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따른 기준 마련 등의 제도 정비 필요
- 특히, 고향사랑기부자의 대상 및 제한에서 업무·고용, 계약 처분에 관한 이해관계자가 기부계약 및 지자체의 기부 권유 및 독려의 범위 등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책임성 강화의 영역
- 기부자들의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한 기부사업의 지정 및 답례품 운영의 방안 등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일수 있는 영역

분류	법 조항 및 내용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사항
책임성 확보	제4조 제5조 제6조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기부의 제한 기부·모금 강요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부자의 대상 및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주민 아닌 사람의 범위</li> <li>- 적극적 권유·독려의 범위</li> <li>- 업무·고용, 관계 및 처분 등의 관계 범위</li> </ul> </li> <li>법인기부의 확대</li> </ul>
	제7조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 전승매체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채널</li> <li>- 대면 행사에서 적극적 기부 권유 및 독려</li> </ul> </li> </ul>
자율성 확대	제 8조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부금 접수처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자 기부금 접수 논의(일본 지정기부제의 제3자 접수 위탁)</li> </ul> </li> <li>기부금 상한액 규정</li> </ul>
	제9조	답례품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 답례품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답례품 발급</li> <li>- 도농 간 교류 및 참여 확대</li> </ul> </li> <li>답례품 운영과 관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별 자율운영 및 민간 위탁 방안</li> <li>- 답례품 운배송 관련 책임 범위 등</li> </ul> </li> </ul>
	제11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클라우드 펀딩 및 지정기부제 운영</li> <li>기금 운영 관련 회계 처리 등</li> </ul>



### 공공목적-공공수단-자발성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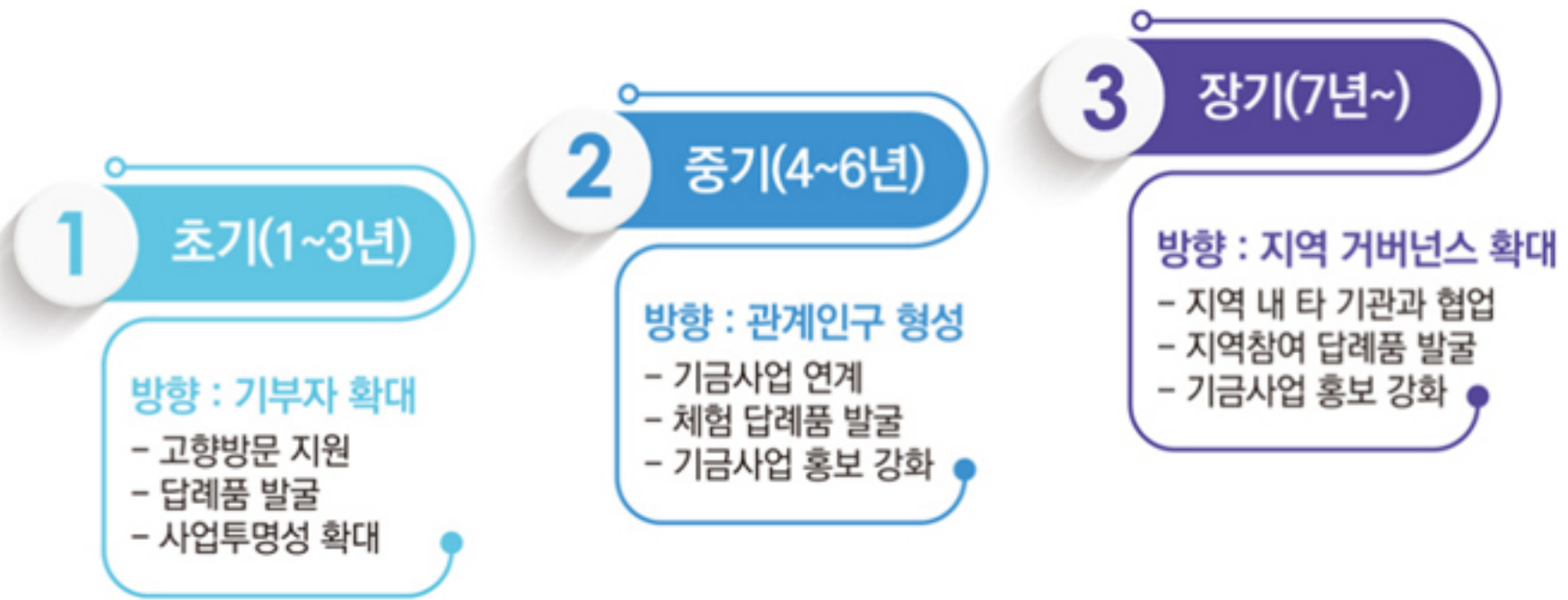
- 고향사랑기부제는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지방재정확충,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기부제로 세액공제의 공적인 혜택을 주되, 기부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기초
- 지자체 차원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특성을 활용하여, 기부자의 자발적 선택 동기를 극대화할 수 있는 1)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 2) 기부사업의 공감 및 동참, 3) 기부사업에 대한 홍보의 전략 수립 필요



\*자료 : Sulek(2009)

### 지자체의 장기 계획 수립에 따른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전략 방안 모색

- 22년도 실효성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전략은 23년도 시행 이전 시기에 ‘선택과 집중’ 전략에 기초하여, 지자체 관련 기부자들에게 기부 독려, 기부자 선호 답례품 발굴, 기부 홍보를 위한 조직, 예산, 인력집중(23년도 말에는 기부금액이 지자체별로 집계되어, 향후 기부운영비용 지출은 15% 이내로 제한)
-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되, 장기 계획에는 1) 초기에는 기부자 확대방안, 2) 기부 사업을 지자체 기금사업과 연계하여 관계인구 형성방안, 3) 지역 내 타 기관과 연계하는 거버넌스 사업 확대 내용 포함



출처 : 전성만, 유보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